

- ☐ 민주노조 사수
- ☐ 임금체계개악 저지
- ☐ 생존권 사수
- ☐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 ☐ 해고자 원직복직

정상화를 빙자한 민영화 정책, 노동탄압 정책을 거부한다!

3월 24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임금피크제 시행 등 소위 ‘2차 정상화 계획’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 90여개 기관의 기관장을 불러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을 우수기관이라고 포장해 사례 발표를 시키고, 회의 말미에는 각 기관장들의 정상화 추진 의지 표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워크숍 시작 1시간 전에 조달청 앞에서 긴급하게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앞으로는 대화하는 척하며 뒤로는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을 강행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계속한다면 오는 4월 11일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민들과 연대해 정상화를 빙자한 민영화 정책, 노동탄압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회유와 협박에 꺾이지 않는 노동자들, 투쟁은 계속된다!

지난해 말까지 가짜정상화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임금동결을 통보받은 13개 공공기관노동조합은 3월 23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은 “정부가 작년의 복지축소에 이어 올해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중국에는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을 대표해 우지연 변호사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근로조건을 제3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 단체협약체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며 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증언자로 나선 공공연구노조 수리과학연구소지부 최연택 지부장은 “부채도 없고 복지도 공무원 수준보다도 낮은데도 일방적인 복지삭감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임금동결까지 시키려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박경득 분회장은 “병원이 정상화 미이행을 피하기 위해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모든 부당·불법행위를 동원하여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이를 비판하고 나서자 병원은 오히려 임금동결이나 단협해지나 양자를 택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임금동결지침이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의 박탈과 노사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알렸다.

민주노총, 왜 4월 총파업인가?

4월은 박근혜 정권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해 핵폭탄급 반노동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시기

- ▶ 정부는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2단계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공무원연금 개악 △비정규직 기간 4년으로 연장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적연금 축소 방침을 3월까지 준비한 후 4월부터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지 밝힘
- ▶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를 우회하는 방법도 고려, 야당 논의가 필요한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 개정이나 취업규칙 개악 가이드라인을 통해 4월 이후 제도를 확정하겠다는 것
- ▶ 박근혜 정권은 2015년 핵심 국정목표로 경제활성화 선포, 그 방법은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은 많이’, 즉 재벌 배불리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 ▶ 정부여당은 전국 선거가 없는 해인 2015년 내에 완료할 계획. 향후 20년 노동조건을 좌우할 핵폭탄급 사안을 일방적이지자 줄속적으로 감행하려는 박근혜 정권
- ▶ 피할 수 없는 4월 대격돌! 순응할 것인가, 총파업으로 지킬 것인가?
- ▶ 노동자의 최고의 무기, 총파업! 반드시 싸워 이겨야 노동자, 민중이 산다!

01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상 그 내용은 △성과강요 해고제 도입 △직무성과급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노동시간연장과 연장수당 삭감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파견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 전체를 개악하려는 재벌 위한 종합선물세트.

02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정부는 부자증세는 거부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해 만만한 공무원들의 연금을 34~47%나 삭감하겠다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려 하지만 실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목적! 공적연금 축소를 지렛대로 재벌의 돈벌이를 보장해주려는 목적.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령화 사회의 노후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

03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전체 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무려 1천조 이상. 반면 가계부채도 1천조를 넘어 폭발위기.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저임금. 최저 하한선인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자 최고임금이 된 사회, OECD 하위권 수준인 최저임금을 국가경제 수준에 맞춰 1만원으로 끌어올려 내수도 살리고 경제민주화도 시작하자.

04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400만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고통 받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돼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실업자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법과 노동조합을!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모든 노동자의 권리도 향상된다!

